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정책 설계에 관한 연구:
전남 장성을 중심으로」

- 머무르는 장성, 돌아오는 장성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여성리더교육과정 문정을)

< 목 차 >

I. 서론	1
1. 문제제기 및 보고서 목적	1
2. 정책환경과 필요성	2
3. 보고서 구성과 범위	2
II. 이론 및 정책현황	3
1. 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의 이론적 배경	3
2. 국가·광역 인구정책 동향	4
3. 장성군 인구정책 추진 현황	6
III. 장성군 인구분석	7
1. 인구 구조와 변화추이	7
2. 인구감소의 주요요인	9
3. 지역 인구분포와 특성	10
4. 종합진단	11
IV. 국내외 사례 분석	12
1. 국내 사례: 경북 의성군 ‘이웃사촌 시범마을’	12
2. 해외 사례: 일본 토야마시 ‘콤팩트 시티’	14
3. 두 사례의 비교와 장성군에 대한 시사점	15
4. 장성군 적용을 위한 핵심 전략방향	16
V. 전략 및 정책 설계	17
1. 인구정책 추진방향	17
2. 지역 특화자산 연계 전략	18
3. 주거·교육·교통 인프라 개선	19
4. 실행 조직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20
5. 관계인구 유입모델 설계	21
6. 종합평가	21
VI. 개선방안	23
1. 핵심정책 제안요약	23
2. 실행 로드맵	24
3. 대상별 맞춤형 지원체계	25
4. 개선방안 종합정리	26
VII. 결론 및 제언	26
1. 정책보고서 요약 및 결론	26
2. 정책 제언 및 향후 추진과제	27
3. 정책 브랜드화	29
4. 마무리	30

< 표·그림 목차 >

<표 2-1> 장성군 활용 가능한 국가·광역 정책지원	5
<표 2-2> 장성군 현행 인구정책 현황	7
<표 3-1> 장성군 인구현황 및 변화	8
<표 3-2> 장성군과 전국 주요 인구지표 비교	8
<표 3-3> 장성군 인구 증감 요인별 현황	10
<표 3-4> 장성군 읍면별 인구 및 고령화 현황	11
<그림 4-1> 경북 의성군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주거단지	13
<그림 4-2> 일본 토야마시 도심 순환 트램 전경	15
<표 4-1> 의성군과 토야마시 사례 비교	15
<그림 5-1> 장성군 5대 핵심전략 개념도	22
<표 6-1> 장성군 인구정책 5대 핵심 제안요약	24
<그림 6-1> 장성군 인구정책 단계별 로드맵	25
<표 6-2> 대상별 지원체계 체크리스트	25
<표 7-1> 정책 제언 요약	28
<그림 7-1> 정책 브랜드화 구성도	29

I. 서론

1. 문제 제기 및 보고서 목적

전라남도 장성군은 최근 수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장성군의 총인구는 2018년 45,795명에서 2023년 42,543명으로 줄어들었으며, 5년 사이 약 3,200명(7.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같은 기간 동안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은 28.3%(2018년)에서 33.2%(2023년)로 증가하며,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노인층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출생아 수는 빠르게 줄고 있으며, 2018년 337명에서 2022년 128명으로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173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2018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 반면, 연간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400명을 웃돌며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감소**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층 인구 비율도 낮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20~39세 청년층은 전체 인구의 약 15%에 불과하며, 이는 학업과 취업 기회를 찾아 광주광역시나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단순한 인구수 감소를 넘어, **지역 경제의 활력 저하, 노동력 부족, 복지 재정의 부담 증가** 등 복합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장성군의 인구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국가 및 광역단위의 정책 지원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자산을 연계한 **정착 중심의 인구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정책 환경과 필요성

중앙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하고,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전국

89개 시·군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2023】.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지방에 거주·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체류형 귀농귀촌센터**를 통해 도시민이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교육생 693명 중 443명(약 64%)이 실제로 지역에 정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라남도 귀농귀촌 지원센터, 2023】.

장성군은 이러한 제도적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인접해 있어 교육·문화·교통 자원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광주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3지구 개발**, **국군 상무대**, **황룡강 및 장성호**, **우수한 농 특산물과 농생명 산업 기반** 등은 장성군만의 특화된 자산으로,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출산 장려금**, **전입 지원금** 등 개별적 지원 정책에 머물러, **정주 기반 구축**이나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구조적인 접근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 단기적인 전입 유도보다는 장기적인 정착과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정착 기반 강화, 삶의 질 향상, 관계인구 확대**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인구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3. 보고서 구성과 범위

이 보고서는 장성군의 인구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총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제3장에서는 대한민국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국가 및 광역 단위의 주요 정책 흐름을 정리하고, 장성군의 인구 현황과 구조적 원인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경북 의성군의 ‘이웃사촌 시범마을’, 일본 토야마시의 ‘콤팩트 시티’ 전략사례를 검토하여, 장성군이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훈을 도출한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단계별 추진계획, 자원 확보방안, 대상별 맞춤형 지원체계 등을 제시한다.

제7장에서는 성과관리 체계, 그리고 장성군의 인구정책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외부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책 브랜드화 전략을 제안한다. 특히, ‘머무르는 장성, 돌아오는 장성’이라는 정책 슬로건은 핵심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으며, 내외부 커뮤니케이션에서 효과적인 브랜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장성군의 인구 문제는 단순히 사람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출산 감소, 사망 증가, 청년 유출이라는 복합적인 원인이 얹힌 구조적인 위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과 지역 자산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정착 중심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인구 변화 추이와 제도적 환경을 살펴보고, 장성군 인구정책의 기초가 될 공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이론 및 정책 현황

1.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의 이론적 배경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단순한 출산율 저하를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0.72으로, 4년 연속 0명대에 머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 2024】 .

이와 함께 **고령화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6%로 이미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넘었고,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공식 진입했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평균 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나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어,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현상이 **노년부양비의 급격한 증가**이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 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수를 의미하는 지표로, 2023년 전국 평균은 24.2명이며, 장성군은 약 50명으로 전국 평균의 **두 배**에 이른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이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또한,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 역시 지방 인구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에서 활용 중인 ‘소멸위험지수’ 기준에 따르면, **가임여성(20~39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하일 경우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장성군은 2023년 기준 **가임여성 비율이 9% 수준**에 불과해 이미 해당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학계와 정책 현장에서는 단순한 출산율 제고 정책을 넘어, 새로운 인구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생활인구**: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지역 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 **관계인구**: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역과 정기적 방문, 정서적·사회적 연계를 갖는 사람들

즉, ‘단순 전입자 수 늘리기’에서 벗어나, **지역과 연결된 다양한 형태의 인구를 폭넓게 포용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2. 국가 및 광역 차원의 인구정책 동향

국가 차원의 인구 정책은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체계적

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설정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서, 청년 고용, 주거, 교육, 돌봄 등 삶의 질 전반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특히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 경력 단절 예방, 육아·가사 부담 완화 등이 핵심 과제로 포함되었다.

한편, 2023년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재정·행정적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성되어 각 지자체가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행정안전부, 2023】.

또한 법무부는 2025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해 거주·취업할 수 있도록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특히 농업·돌봄·중소기업 등에서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법무부, 2024】.

전라남도는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남 6개 시·군에서 693명이 교육을 받았고, 이 중 64%가 실제로 정착에 성공했다는 성과를 보였다【전라남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전남도는 앞으로 모든 시·군에 1개소 이상의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 표 2-1. 장성군 활용 가능한 국가·광역 정책 지원 >

지원 내용	재원 규모	근거
지방소멸대응기금	연 1조원(전국 89개 시·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2023년 시행)
외국인·재외국민 정착 지원	-	법무부(2025년 본격 시행)
도시민 농촌 정착	-	전라남도(정착률 64%)

(출처: 행정안전부, 법무부, 전라남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이처럼 국가 및 광역 차원의 정책 환경은, 장성군이 독자적인 인구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장성군 인구정책 추진 현황

장성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식 지정되기 전부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해 왔다. 주요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 출산 장려 정책

첫째 자녀 400만 원, 둘째 600만 원, 셋째 800만 원, 넷째 이상 1,00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난임 부부 시술비와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전액 지원된다.

- 청년 지원 정책

청년 창업보육센터 운영, 창업거리 조성, 청년 근속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 중이다. 2024년에는 ‘가족행복센터’를 설립해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상담센터등을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 귀농·귀촌 지원 정책

농업 창업 교육, 주택·농지 정보 제공, 체류형 교육 등 원스톱 귀농 지원체계를 마련해 도시민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 생활인구 확대 노력

황룡강 노란꽃잔치와 같은 축제 개최, 농촌 체험 관광 상품 개발 등을 통해 방문객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 표 2-2. 장성군 현행 인구정책 현황 >

구분	주요 내용	지원 수준
출산장려	출산축하금	1자녀 400만원, 4자녀 이상 1,000만원
청년지원	창업·근속 지원	청년 창업보육센터 근속장려금
귀농·귀촌	원스톱 지원체계	교육·주택·농지 정보
관광·체험	축제·체험 관광	황룡강 노란꽃잔치 등

(출처: 장성군청 정책자료)

이러한 정책들은 일부 긍정적인 성과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2023년 장성군의 **합계출산율은 1.34명**으로 전국 평균(0.72명)의 거의 **두 배 수준**이며, 전국 기초 지자체 중 **4위를 기록**했다 【통계청, 2024】. 그러나 가임여성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고 있어, 출산율이 높더라도 **출생아 수 자체를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성군 인구정책은 **단순 전입 유도에서 벗어나**, 정착 기반 강화, 세대 통합, 관계인구 관리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인 인구감소 현상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이미 활발히 진행 중이며, 장성군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향후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구 구조와 감소 요인을 세부 분석하여 실질적인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장성군의 실제 인구 구성과 변화 추이, 그리고 인구 감소의 원인을 정량적 지표를 통해 분석한다.

Ⅲ. 장성군 인구 분석

1. 인구 구조와 변화 추이

장성군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8년 장성군의 인구는 45,795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42,543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5년간 약 3,252명(-7.1%)이 감소한 수치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 표 3-1. 장성군 인구현황 및 변화 (2018 - 2023)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률 (‘18-’23)
총 인구(명)	45,795	45,739	44,464	43,365	43,146	42,543	-7.1%
출생아수(명)	337	280	263	163	128	173	-48.7%
사망자수(명)	400+	400+	400+	400+	400+	400+	-
고령인구비율(%)	28.3	29.5*	31.2*	32.5*	33.1	33.2	+4.9%p
청년인구비율(%)	-	-	-	-	-	15.0	-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통계청 인구동향주: 2019-2021년 고령인구 비율은 추정치)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18년 28.3%에서 2023년 증가하여, 장성군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출생아 수 역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37명이던 출생아 수는 2022년 128명까지 감소했으며, 2023년에는 173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2018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같은 해 연간 사망자 수는 400명을 초과하며,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감소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표 3-2. 장성군과 전국 주요 인구지표 비교 (2023년 기준) >

장성군	전국 평균	비 고
1.34명	0.72명	전국 4위 수준
33.2%	20.6%	초고령사회 진입
50명*	24.2명	전국 평균의 2배
9%	-	소멸위험 기준 이하

(출처: 통계청,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주: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이러한 지표는 장성군의 인구가 자연적 증가(출생)보다는 자연적 감소(사망)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인구 감소의 주요 요인

장성군의 인구 감소는 단일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자연적 요인(출생·사망)과 사회적 요인(전입·전출)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① 자연적 요인

- 출생률은 높지만 가임여성이 적음

장성 합계출산율은 1.34명으로 전국 평균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

이는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임여성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어, 출산율이 높더라도 출생아 수 증가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 고령화로 인한 사망 증가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연간 사망자 수가 400명을 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② 사회적 요인

- 청년층의 유출

2023년 기준 20~39세 청년 인구는 전체의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고등교육, 일자리, 문화 등 정주기반이 부족하여 광주광역시나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전입 인구가 전출을 상쇄하지 못함

일부 귀촌인이나 군 전역자의 전입도 있으나, 전출 규모를 완전히 보완할 만큼의 유입은 아닌 상황이다.

< 표 3-3. 장성군 인구 증감 요인별 현황 >

자연적 요인	사회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출산율(1.34명) • 출산장려금 정책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유입 • 군 전역자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임여성 인구 절대 감소 •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수 지속증가(연 400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 유출(광주·수도권) • 교육·취업 기회 부족
자연감소 구조 고착	청년층 중심의 순유출 지속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 장성군 통계연보)

요약하면, 장성군의 인구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 고령자 사망 증가(자연감소)와 청년층 중심의 순유출(사회적 감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3. 지역별 인구 분포와 특성

장성군 내 읍·면 간의 인구 분포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장성읍**
 - 약 13,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군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집중된 행정·생활 중심지이다.
- **진원면·남면**
 -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첨단3지구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약 3,800세대, 9,000명 이상의 신규 유입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 **북일·북하·서삼면 등 농촌 지역**
 - 인구가 1,0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고령화가 심각해 행정기능 유지를 우려할 정도의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2023년 기준, 장성군의 90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530명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장수 인구가 많은 편이다. 이는 돌봄, 건강관리, 고독사 예방 등 고령층 대상 복지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노년부양비 심화

- 장성 노년부양비는 약 50명으로,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 수가 전국 평균(24명)의 2배 수준이다. 이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 지방재정 부담 증가, 지역 활력 저하로 직결된다.

< 표 3-4. 장성군 읍·면별 인구 및 고령화 현황 (2023년 기준) >

구분	총인구(명)	65세 이상 비율(%)	비고
장성읍	약 13,000	28.5	행정·생활 중심지
진원면	약 5,200	23.1	첨단3지구 개발 예정
남면	약 3,400	27.8	첨단3지구 개발 예정
북일면	약 1,200	42.5	고령화 심각
북하면	약 1,300	44.1	소멸 위험지역
서삼면	약 1,500	46.3	소멸 위험지역
기타 6개 면	약 16,900	34.0	-
합계	42,543	33.2	-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2023.12.말 기준), 자체 계산)

4. 종합 진단

장성군은 현재 삼중고(三重苦)에 직면해 있다.

구분	내용
출생률 저하	출산율은 양호하나, 가임여성 인구의 절대적 감소로 출생아 수 확대에 한계가 존재
청년층 유출	교육·일자리 기회 부족으로 청년 비중 축소
고령화 심화	65세 이상 비율 33.2%, 부양비·복지수요 급증

그 결과, 인구 구조는 역삼각형 형태로 왜곡되어 있고, 생산연령 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는 증가하며, 미래 성장동력인 청년층의 유출이 지속되며,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인구 유입 정책(전입장려금 등)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 내에 머물 수 있는 정착 기반을 구축하고, 세대 간 통합을 유도하며, 장성의 특화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성공적인 인구정책 사례로 평가받는 경북 의성군과 일본 토야마시의 전략을 분석하고, 장성군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V.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1. 국내 사례: 경북 의성군 ‘이웃사촌 시범마을’

경상북도 의성군은 인구 고령화와 청년 유출이 동시에 심화되어, 2018년 기준 소멸위험지역 1위로 지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성군은 2019년부터 안계면을 중심으로 ‘이웃사촌 시범마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인구 활력 회복을 위한 종합 전략을 실행하였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목표로 주거, 일자리, 문화, 복지, 공동체 형성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거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청년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귀촌·귀농 희망자에게 제공

-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보육센터 운영, 스마트팜 단지 조성, 도시재생기업 육성, 사회적 기업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내 일자리 기회를 확대

- 생활 인프라 확충

안계 행복플랫폼, 작은 미술관, 공동육아나눔터, 청년 커뮤니티 공간등 청년 친화적 생활 SOC를 조성

- 공동체 활성화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이러한 패키지형 전략을 통해 2019년 이후 약 90여 명의 청년이 안계면으로 이주하였고, 이 중 약 60%가 창업 또는 정규 취업을 통해 실제로 지역에 정착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입 속도는 다소 둔화되었으며, 특히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보와 청년 공동체의 자생력 확보가 향후 성공의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사례는 주거·일자리·공동체를 연계한 패키지형 청년 정책이 일정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며, 단순 인센티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정주 여건 전반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4-1. 경북 의성군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주거단지 (의성군 제공) >



(의성군 안계면에 조성된 ‘청춘家’ 청년주거단지의 전경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과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친환경 요소를 갖춘 청년 맞춤형 정주 인프라를 보여줌)

2. 해외 사례: 일본 토야마시 ‘컴팩트 시티 전략’

일본 토야마시는 2000년대 초부터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면서, 도시 기능을 도심과 주요 생활 거점에 집중하는 ‘컴팩트 시티(Compact City)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 전략의 핵심은 주거, 의료, 복지, 문화 등 주요 생활 서비스를 중심지에 모아 배치하고, 교통망을 강화하여 고령자와 청년 모두가 살기 편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 **거점 중심 도시 구조**

도시 전역에 무분별하게 퍼져 있던 기능을 정비하고, 도심과 거점 생활권에 주거 및 서비스를 집중 배치한다.

- **교통 인프라 개선**

2006년 개통된 노면전차(LRT, 포트램)와 도심을 순환하는 ‘센트램’등의 대중교통망을 강화해, 고령자의 이동권과 청년의 정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 **재정 효율화**

도시 기반시설 투자를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전환해,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도 서비스 품질은 유지할 수 있었다. 분산된 시설을 통합하고, 노후건물은 리모델링하여 복합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재생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이 전략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기준 도심·교통축 인근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28%였으나, 2022년에는 40% 이상으로 증가했다. LRT 이용객 수는 개통 초기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도심 공실률도 점차 개선되었다.

토야마시 사례는 도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교통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2. 일본 토야마시 도심 순환 트램 전경 (출처:동아일보) >



(일본 토야마시 도심의 ‘시내환상선’ 트램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승·하차하는 모습)

3. 두 사례의 비교와 장성군에 대한 시사점

앞서 살펴본 경북 의성군의 ‘이웃사촌 시범마을’과 일본 토야마시의 ‘콤팩트 시티 전략’은 각각 청년층 유입(농촌)과 고령화 대응(도시)이라는 상이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정착 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구조를 안정시키려는 공통된 목표를 지닌다.

아래 표는 두 정책 사례를 ‘주요 대상’, ‘정책 방식’, ‘핵심 전략’, ‘주요 성과’의 항목별로 비교한 것으로, 장성군이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정책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 표 4-1. 의성군과 토야마시 사례 비교 >

구분	의성군 이웃사촌 마을	일본 토야마시 콤팩트 시티
주요 대상	청년층 중심	고령자와 청년층 모두
정책 방식	정착패키지(주거+일자리+공동체)	도시 기능 집중, 교통 강화
핵심 전략	청년 유입 및 지역 공동체 형성	정주 기반 인프라 재정비
주요 성과	청년 유입과 일부 정착 성과	도심 인구 비율 증가, 이동성 개선

두 사례는 정주 여건 전반을 통합적으로 설계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 인센티브 제공이 아닌 생활 기반 인프라와 공동체 형성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을 시도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의성군은 청년층 유입과 정착을 유도한 농촌 사례로서, 장성군의 귀농·귀촌 정책이나 청년 정착 전략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토야마시는 도시 기능을 재편하고 교통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고령자와 청년층 모두에게 편리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이는 장성군의 읍·면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한 압축형 도시 전략에 적용 가능성이 높다.

장성군 또한 지역 여건과 인구 구조를 고려하여 청년층, 고령층, 관계인구 등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는 맞춤형 정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4. 장성군 적용을 위한 핵심 전략 방향

두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교훈을 바탕으로, 장성군이 추진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청년 정착 패키지 도입

첨단3지구 입주 예정 기업 근로자, 국군 상무대 전역자,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주거, 일자리, 창업, 공동체 참여 등을 하나로 묶은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의성군과 같은 패키지형 접근이 필요하다.

- 생활권 압축과 교통망 개선

읍·면 생활권을 중심으로 문화, 의료, 교육, 복지 기능을 집약하고, 고령자와 청년 모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순환버스와 1)온디맨드 교통체계를 도입한다. 이는 토야마시의 콤팩트 시티 전략처럼 도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식이다.

1) 이용자가 사전 예약하면 수요에 맞춰 차량이 탄력적으로 운행되는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 **지역 자산을 활용한 장성형 모델 개발**

황룡강, 장성호, 농특산물, 농생명 산업 등을 활용한 6차 산업 모델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인구를 정주인구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장성만의 고유한 문화와 자연, 산업 자원을 연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은 장성군의 인구 구조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으로, 정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 전략들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정책 설계를 제안한다.

V. 전략 및 정책 설계

1. 인구정책 추진 방향

장성군의 인구정책은 단순 전입 유도에서 벗어나 **정착 기반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을 중심축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① 청년층 중심의 정착 기반 강화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문화·창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광주광역시 인근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첨단3지구 입주 기업의 청년 근로자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② 지역 특화자산과의 전략적 활용 및 연계

첨단 3지구, 국군 상무대²⁾, 황룡강·장성호, 농특산물, 실버복지 인프라 등 장성군이 보유한 지역 자산을 연계하여, **청년층·전역자·귀촌인·고령층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

2)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에 위치한 육군 교육훈련기관으로, 장교·부사관·병의 보병·기갑·포병 등 전투병과 전문교육을 담당함. 면적은 무려 1024만㎡(309만평)이며 연 교육인원은 33,000여명이다. (출처: 위키백과)

③ 세대 간 통합과 공동체 형성

청년, 전역 군인, 귀촌인,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이 지역 사회 안에서 **공존하고 교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세대 간 단절을 해소하며 지속 가능한 정주 공동체를 조성해야 한다.

2. 지역 특화자산 연계 전략

장성군의 주요 자산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

1) 첨단3지구 기반 청년 신도시 조성

정보통신기술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 공급, 셰어하우스 조성

청년 커뮤니티센터, 공유 사무공간,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SOC 확충

전입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원스톱 행정 지원 체계 구축

2) 국군 상무대 전역자 정착 프로그램

전역 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한 달 살

드론, 스마트농업 등 실무 중심 창업·취업 교육 실시

지역 기업 및 농공단지와 연계한 전역자 취업 루트 설계

전역자 전용 임대주택, 정착지원금, 멘토링 체계 마련

3) 귀농 2.0 체류형 귀촌타운

일정 기간 머물며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주거단지 조성

농산물 가공·체험·창업 교육 제공, 초기 귀촌 정착 지원

기존 마을과의 갈등 최소화를 위한 주민 교류

4) 황룡강 중심 6차 산업화 모델

황룡강 축제, 장성호 관광자원, 지역 농산물(딸기·사과·포도 등)을 연계

농산물 가공 및 로컬푸드 브랜드 육성

체험·관광·예술 활동 결합 창업모델 지원

5) 실버복지 중심 고령친화단지 조성

상시 간호, 건강관리, 치매 돌봄 등 복지 서비스 통합 제공
평생교육, 문화교류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참여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3. 주거·교육·교통 인프라 개선

정착 기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주거, 교육, 교통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주거

읍·면 단위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임대 청년주택, 세어하우스로 활용.
전입자 대상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 교육

보육·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확충. 농생명·문화예술 분야 특화고 설립 검토

• 교통

고령자·청년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마을순환버스 및 온디맨드 교통망 도입.
교통취약 지역 중심 맞춤형 교통 서비스 제공

• 복합 SOC

읍·면 중심지에 의료, 문화, 체육,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으로 정주 여건 강화

4. 실행조직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인구정책은 단기성과에 급급한 개별 사업이 아니라, 군정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추진조직을 명확히 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제도화하며,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통합적 실행 구조가 필요하다.

- **군수 직속의 인구정책 전담부서 설치**

인구 정책의 기획, 조정, 성과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군수 직속으로 설치하여 추진력을 확보한다. 기존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인구 관련 업무를 통합 조율한다.

- **부서**

주요 전략과제별로 PMO(Program Management Office) 체계를 통해 부서 간 기능 연계를 제도화하고, 공동 목표 아래 협업을 유도한다.

- **민(民)**

지역 내 대학, 농업기술센터, 청년단체, 귀촌인 커뮤니티 등과의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다각적 자원 확보 전략**

중앙부처 공모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 국비 확보와 함께 민간 투자(PPP), 주민참여예산제, 민간투자유치 등을 통한 예산 다변화 전략이 요구된다.

5. 관계인구 유입 모델 설계

관계인구는 단기 체류자, 출향민, 전역자, 정기 방문객 등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역과 정서적·사회적으로 연결된 인구를 뜻한다. 단순 전입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활인구에서 정주인구로 전환하는 단계적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관계인구 대상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지속적 관리**

출향민, 상무대 전역자, 귀촌 체험 참여자 등 주요 대상군을 유형별로 구분해 관계인구 DB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장기 유입 가능성을 관리한다.

- 정기 교류 행사 운영

출향인 고향방문 행사, 전역자 환영 간담회, 지역 청년 네트워크 행사 등을 통해 장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재정착 유도를 모색한다.

- 체험 및 단기 정주 프로그램 확대

‘한 달 살기’, 농업·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이 경험이 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온라인 홍보 및 상담 시스템 구축

주거, 일자리, 창업, 교육 등 지역 정착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상담·신청 연계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6. 종합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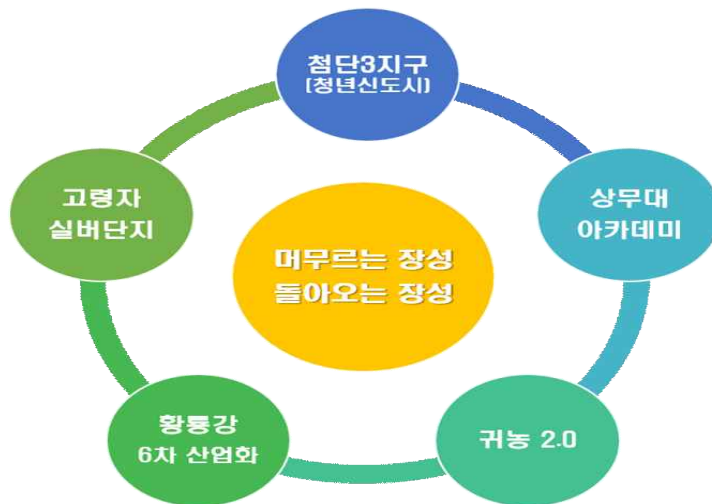
V장에서 제시한 전략은 장성군이 처한 인구 구조의 현실을 반영하고, 청년, 전역자, 귀촌인, 고령자, 관계인구 등 다양한 맞춤형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단순 유입 중심 정책을 넘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정착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전략 축을 통해 실질적인 인구 활력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 5대 핵심 전략 축

- ① 첨단3지구 청년 신도시
- ② 상무대 전역자 정착 프로그램
- ③ 귀농 2.0 체류형 귀촌타운
- ④ 황룡강 기반 6차산업화 모델
- ⑤ 실버복지 중심 고령친화단지

[그림 5-1] 장성군 5대 핵심 전략 개념도



이러한 핵심 전략은 단독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정착 인프라 보장 요소와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이다.

- 정착 인프라 보장 요소

- 주거, 교육, 교통, 돌봄 중심의 생활권 기반 확충
- 전담조직과 민관 협업 체계 강화
- 체계적 관계인구 관리 및 정주 전환 모델 구축

요약하면, 장성군 인구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사람을 유입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고, 정착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전략들이 실제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선과제 선정, 단계별 로드맵, 대상별 지원체계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VI. 개선방안

1. 핵심 정책 제안 요약

앞서 제시한 전략을 실행력을 갖춘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장성군에 적합한 다섯 가지 핵심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첨단3지구 청년 신도시 조성**
 - ICT·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유치
 - 공공임대 및 세어하우스형 청년 임대주택 공급
 - 청년 커뮤니티센터와 창업공간 조성
- **상무대 전역자 정착 프로그램 운영**
 - 전역 예정자 대상 창업·취업 교육
 - ‘한 달 살기’ 정주 체험
 - 전용 임대주택과 정착지원금 제공
- **귀농 2.0 체류형 귀촌타운 운영**
 - 단기 체류형 주거 공간 조성
 - 농업기술·가공 창업 교육
 - 마을 공동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
- **황룡강 중심 6차산업화 모델 추진**
 - 농산물 가공 및 체험 관광 결합
 - 로컬푸드 브랜드화
 - 청년 창업 연계 지원
- **고령친화 실버단지 조성**
 - 의료·돌봄·커뮤니티가 결합된 실버복합단지
 - 평생교육·세대 통합 프로그램 운영
 - 고령자 건강관리와 정주 여건 개선

< 표 6-1. 장성군 인구정책 5대 핵심 제안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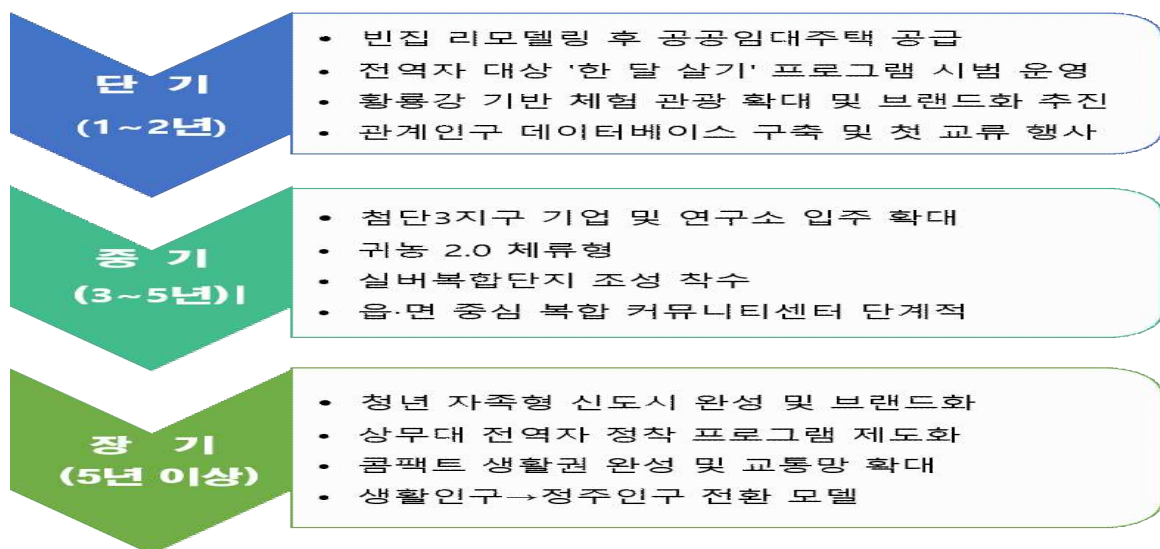
제안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첨단3지구	청년신도시·기업유치·임대주택	청년 전문인력 정착
상무대	스타트업 교육·한 달 살기	전역자 지역 정착
귀농 2.0	체류형 타운·창업지원	안정적 귀촌 정착
황룡강	가공·체험·관광 결합	생활인구의 정주 전환 유도
실버단지	의료·돌봄 결합형 주거	삶의 질 제고

이 다섯 가지 과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정착 기반 강화와 대상별 맞춤 전략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구조다.

2. 실행 로드맵: 단기 - 중기 - 장기 단계별 추진 계획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순서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장성군의 여건을 고려한 실행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 그림 6-1. 장성군 인구정책 단계별 로드맵 >



단계별로 사업의 성격과 파급력을 고려해 단기 성과와 중장기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3. 대상별 맞춤형 지원체계

장성군 인구정책은 청년, 전역자, 귀촌인, 고령자, 관계인구 등 다양한 대상군의 필요와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아래는 대상별로 정리한 지원체계이다.

< 표 6-2. 대상별 지원체계 체크리스트 >

대상	주거 지원	일자리·창업	문화·복지	기타 지원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세어하우스	창업보육, 취업연계	체육·문화 공간	정착지원금
상무대 전역자	전역자 전용 임대주택	창업·직무 교육, 지역 취업 연결	'한 달 살기' 체험	멘토링, 정착금
귀촌인	체류형 주거단지	농업·가공 창업 교육	마을교류 프로그램	생활정착금
황룡강 생활인구	-	체험 창업 기회 제공	문화·관광 콘텐츠	-
고령자	실버복합 주택	-	돌봄 서비스, 평생교육	건강관리 서비스

각 대상군에 필요한 주거 안정, 직업 연결, 복지 인프라, 사회적 관계 형성 요소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착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

4. 개선방안 종합 정리

장성군의 인구정책이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 **정책 체계화:** 인구정책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군수 직속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정책을 통합 관리

- **성과관리 강화:** 단기(전입자 수, 출산율 등)와 중장기(정착률, 생활인구 전환율 등) 지표를 분리하여 관리
- **재원 확보 다변화:** 국비·기금 활용뿐 아니라 민간 투자(PPP), 공모사업 연계 등을 통한 재정기반 확보
- **주민 참여 확대:**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 전 과정에 주민·청년·귀촌인의 참여를 제도화
- **유연한 실행체계 마련:** 정책 추진 결과에 따라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 구축

이러한 개선방안은 정착률을 높이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구 구조 회복과 지역 활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핵심 정책 제언을 정리하고, 장성군 인구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사회적 기반을 제시한다.

Ⅶ. 결론 및 제언

1. 정책보고서 요약 및 결론

본 보고서는 장성군의 인구감소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정착 중심의 통합 인구정책을 설계하였다.

- **인구 현황**
 - 장성군 총인구는 2018년 45,795명에서 2023년 42,543명으로 5년간 7.1% 감소하였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출생아 수는 같은 기간 337명에서 173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고령인구 비율은 28.3%에서 33.2%로 상승

- **구조적 원인**

- 출생아 수 감소 및 고령자 사망 증가에 따른 자연감소와, 교육·일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 순유출이 동시에 작용

- **사례 분석**

- 경북 의성군의 청년 정착 패키지, 일본 토야마시의 콤팩트 시티 전략에서 정착률·생활권 관리의 교훈 도출

- **전략 설계**

- 첨단3지구, 국군 상무대, 황룡강·장성호, 농특산물, 실버복지 자산을 기반으로 한 **5대 전략 축**(청년신도시· 상무대 아카데미· 귀농 2.0· 6차산업화· 실버단지) 제시

- **개선방안**

- 단계별 로드맵(단기 - 중기 - 장기)과 대상별 지원체계를 통해 실행 가능성을 강화

결론적으로, 장성군 인구정책은 단순 전입 유도에서 벗어나, **머무르고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장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2. 정책 제언 및 향후 추진 과제

① 인구정책 최우선 과제화

인구문제를 군정 전반의 핵심 과제로 격상하고, 군수 직속 전담조직과 PMO 체계(사업전담관리팀)를 구축해 추진력을 강화해야 한다.

② 단기성과와 중장기성과의 균형

단기적으로는 전입자 수, 출산장려금 신청 건수, 귀촌인 교육 수료율과 같은 가시적 성과지표(KPI)를 확보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정착률·청년 순증·생활 인구 전환율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③ 재원 확보와 효율적 활용

매년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자본 참여(PPP)도 병행해야 한다.
기존 예산은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재구조화해 효율성을 높인다.

④ 주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

인구정책은 행정 주도가 아닌 주민 공감·참여가 핵심이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주민·청년·귀촌인 의견을 반영하고, ‘환영문화(Welcome culture)’를 조성해야 한다.

⑤ 성과 관리 및 피드백 체계 강화

모든 정책에는 핵심성과지표를 부여하고, 주기적 평가를 통해 보완한다.
성과가 큰 사업은 확대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신속히 조정하는 ‘유연한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 표 7-1. 정책 제언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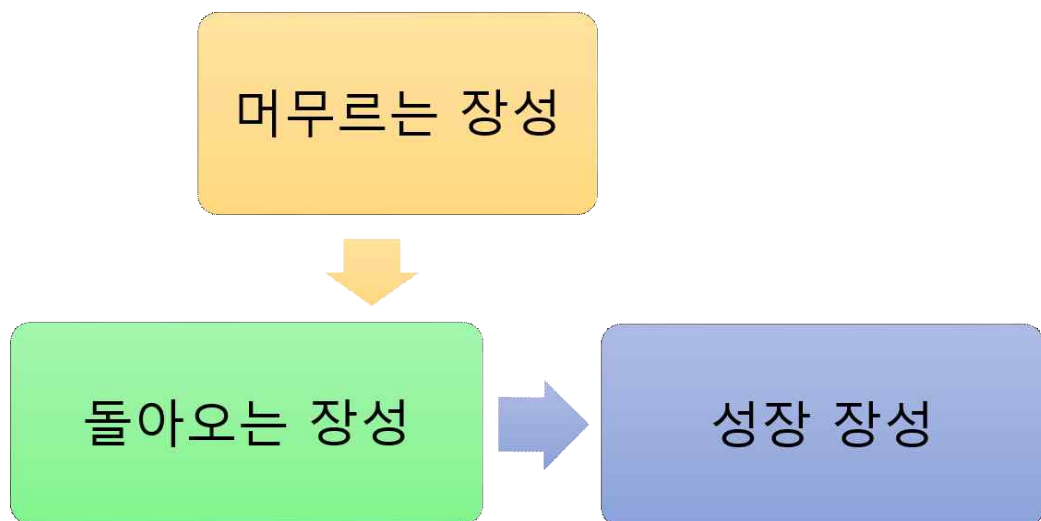
제언	주요 내용	비고
①	인구정책 최우선 과제화	군정 전반 핵심과제
②	단기성과 + 중장기성과 균형 유지	가시적 성과지표
③	재원 확보 및 민간협력 확대	국비+민간자본
④	주민 참여·공감대 형성	주민공감·참여 핵심
⑤	성과 관리·피드백 체계 강화	유연한 관리체계

3. 정책 브랜드화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주민과 외부 모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책 브랜드가 필요하다.

- 머무르는 장성: 청년·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공간
- 돌아오는 장성: 전역자·출향민·귀촌인이 다시 찾아오는 고향
- 성장하는 장성: 산업·교육·복지 자산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갖춘 지역

< 그림 7-1. 정책 브랜드화 구성도 >



이 브랜드를 정책 홍보, 주민참여 프로그램, 대외 이미지 제고에 일관되게 활용할 경우, 정책 공감대 확산과 외부 인구 유입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4. 마무리

장성군 인구정책은 단순히 인구 수 증가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군민이 삶의 만족을 느끼고, 외부인이 찾아와 정착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장성군 인구정책의 본질적 목표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전략과 개선방안이 실현될 때, 장성군은 인구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행정의 결단, 주민의 참여, 민간과 외부 협력이 어우러질 때, “머무르는 장성, 돌아오는 장성”이라는 비전은 현실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장성군청. (2018 - 2024). 「주민등록인구 통계」. 장성군 통계정보시스템.
2. 행정안전부. (202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자료.
3. 통계청. (2024.02.22). 「2024년 출생·사망 통계(잠정)」 보도자료.
4. 매일경제. (2024.02.23). 『‘인구 감소’ 전남 장성, 희망 켜다』.
5. 연합뉴스. (2024.02.22). 『장성군 지난해 출생아 수 173명…35.2% 증가』.
6. KPI뉴스. (2024.03.05). 『전남 장성군 합계출산율 1.34명 전국 4위』.
7. 주간장성. (2023.01.10). 『장성군 인구 소멸 '10년 전부터 급가속 중』.
8. 경상북도청·의성군청. (2023). 「이웃사촌 시범마을 추진 현황 보고서」.
9. 동아일보. (2023.07). 『日 도야마 도심 순환 트램, Compact City 전략 성공사례』.
10. OECD. (2018). *Sustainable Urban Policy in Toyama, Japan*.
11. 전라남도 귀농귀촌지원센터. (2023).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 성과 보고서」